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선 결정 요인

- 제21대 총선을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허진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선 결정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며, 더불어민주당(253명)과 미래통합당(236명)의 지역구 후보자 48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정당 내 소수의 실력자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천하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식보다 경선을 통한 방식이 과정의 민주성뿐 아니라 결과의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 253개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 경선을 통한 후보자 공천은 전략(우선)공천, 단수공천 등 비경선 방식보다 당선 가능성이나 득표율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경선의 ‘보너스 효과(primary bonus)’가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여당 후보자인지 아닌지가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 속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정권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을 압도해 ‘여당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현직 국회의원이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때 얻는 이른바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자 수와 당선 가능성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다른 정당 후보자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주요어 : 국회의원 선거, 21대 총선, 공천 유형, 경선, 당선 결정 요인
학 번 : 2007-22226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1. 연구의 대상	5
2.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9
제 1 절 민주성과 효율성	9
제 2 절 규범적 연구	10
1. 공천의 민주화	10
2.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과 문제점	13
3. 규범적 연구의 한계	19
제 3 절 경험적 연구	19
1. 공천 과정에 대한 분석	20
2. 공천 결과에 대한 분석	22
3. 공천 유형에 따른 의정활동 분석	26
제 3 장 연구의 설계	29
제 1 절 연구 문제	29
1. 정당 내부의 요인	29
2. 정당 외부의 요인	32
3. 후보자 개인의 요인	33
제 2 절 연구의 변수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5

3. 통제변수	35
제 3 절 연구의 모형	37
제 4 장 기초 분석	38
제 1 절 공천 기준	38
제 2 절 공천 유형	40
제 3 절 선거 결과	46
제 5 장 심층 분석	55
제 1 절 기술통계	55
제 2 절 가설의 검증	60
1. 정당 내부의 요인	61
2. 정당 외부의 요인	76
3. 후보자 개인의 요인	78
4. 통제변수	80
5. 연구 결과의 요약	81
제 6 장 결론	83
제 1 절 연구의 의의	8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0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대상	7
[표 2-1] 오픈 프라이머리와 여론조사 경선	14
[표 2-2] 바람직한 후보자 공천 방법	16
[표 2-3] 정당의 정책 결정 권한에 대한 당원 평가	17
[표 2-4] 17대 총선 연구의 가설 설정	22
[표 2-5] 20대 총선의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당선율 ..	24
[표 2-6] 20대 총선의 지역별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당선율 ..	25
[표 2-7] 의원별 법안 가결률	28
[표 4-1] 공천 심사 기준 비교	38
[표 4-2] 경선 방식 비교	39
[표 4-3]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유형	41
[표 4-4]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공천 유형	42
[표 4-5]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공천 유형	43
[표 4-6]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공천 유형 ...	44
[표 4-7]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결과(당락) ..	47
[표 4-8]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결과(득표율) ·	47
[표 4-9]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당락)	48
[표 4-10]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득표율)	49
[표 4-11]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당락)	50
[표 4-12]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득표율)	51
[표 4-13]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당락) ..	52
[표 4-14]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득표율)	53
[표 5-1]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당선율	55
[표 5-2]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56

[표 5-3] 현역 집단과 비현역 집단 간 당선율	56
[표 5-4] 현역 집단과 비현역 집단 간 득표율	57
[표 5-5] 남성과 여성 간 당선율	57
[표 5-6] 남성과 여성 간 득표율	58
[표 5-7] 전직 단체장 집단과 비전직 단체장 집단 간 당선율	58
[표 5-8] 전직 단체장 집단과 비전직 단체장 집단 간 득표율	58
[표 5-9] 전직 의원 집단과 비전직 의원 집단 간 당선율 ·	59
[표 5-10] 전직 의원 집단과 비전직 의원 집단 간 득표율	60
[표 5-11]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62
[표 5-12] 더불어민주당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63
[표 5-13] 미래통합당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64
[표 5-14]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65
[표 5-15]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66
[표 5-16] 미래통합당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67
[표 5-17] 경선-비경선 집단 간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70
[표 5-18] 더불어민주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71
[표 5-19] 미래통합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72
[표 5-20] 경선-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73
[표 5-21] 더불어민주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74
[표 5-22] 미래통합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75
[표 5-23] 현역 집단과 비현역 집단의 선거 결과	78
[표 5-24]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81

그 립 목 차

[그림 2-1] 라합과 하잔의 공천 방식 분석틀	11
[그림 3-1] 공천 영향 요인과 공천 유형, 선거 결과의 경로도 ..	3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는다. 헌법은 정부·법원과 같은 헌법기관 중에서도 국회를 가장 앞세워 규정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앞서 ‘선출된 권력’을 먼저 다룬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행정의 전문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입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런 점에서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총선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공천)에서 시작된다. 매년 총선 때마다 무소속 당선자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 정당과 무관한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기는 힘들다.¹⁾ 현행법에서도 정당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공직후보자 추천’을 꼽고 있다(이준한, 2014). 정당법 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정당이라면 마땅히 공직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차례의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각각 2명(17대), 25명(18대), 3명(19대), 11명(20대), 5명(21대)이다. 18대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많았지만 친박무소속연대(18대)의 돌풍과 새누리당 공천과동(20대)의 결과 무소속 당선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순수 무소속 후보자의 역량으로 보기는 힘들다. 실제 그렇게 당선된 무소속 후보자는 결국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해 의정활동을 폈다.

그래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정당이 지니는 주된 기능 중의 하나이자 정치적 충원(political recruitment)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여겨진다(길정아, 2011). 심지어는 공천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정당이 후보자 선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의견까지 존재한다(Schattschneider, 1942). 게다가 이익표출과 같은 정당의 다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성치훈·진영재, 2016; 최준영, 2012; 박명호, 2007; Hazan and Rahat, 2010; Katz, 2001).

공천이 이처럼 중요한 만큼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 정당은 공천에 상당한 공력을 투입한다. 하지만 각 후보자의 경쟁력이나 도덕성, 능력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보다는 정당 내 계 세력 간의 패권싸움이 공천 과정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²⁾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벌어진 친이명박계의 친박근혜계³⁾에 대한 공천 학살 논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진박(眞朴)’⁴⁾ 논란과 ‘옥새런’ 사건⁵⁾ 등이 대표적이다.

2) 미국의 정치학자 J. 오스틴 래니(J. Austein Ranney)는 정당에서 공직후보자 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는 걸 당연한 일로 여겼다. 선출직 공직으로 진출해 당을 장악하려는 정치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당내 경쟁을 뚫고 공천을 받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3)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극심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시 경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친이명박계(친이계)와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친박근혜계(친박계)로 나뉘었고, 이러한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08년 4월 총선 때도 극심하게 노출됐다.

4)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치러진 2016년 4월 20대 총선은 선거 전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그런 상황에서 핵심 권력층에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국회 내에 우호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결국 친박계 중에서도 진짜 친박계로 불리는 ‘진박계’라는 말이 나왔고, 새누리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를 중심으로 이른바 ‘진박 후보’와 기존의 비박근혜계(비박계)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두고 경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비박계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됐고, 유승민 의원도 결국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됐다.

5)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을 이끌던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 핵심이었다가 비

2020년 4월 실시된 21대 총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천을 진두지휘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소임을 모두 마치지 못한 채 중도 사퇴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황계 인사와 친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다수 배제한 게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석연 부위원장 대행 체제가 됐다.⁶⁾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갈등이 겉으로 불거지진 않았다. 당초 친문재인계(친문계) 의원이나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이른바 ‘진문(眞文)’ 후보자가 비문재인계(비문계) 인사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했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표출될 것 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출신 인사의 상당수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문제가 겉

박계가 된 대표적 인물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핵심부와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종섭(대구 동구갑) 전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대구 달성군) 전 국무조정실장, 이재만(대구 동구을) 전 대구 동구청장, 유영하(서울 송파구을)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재길(서울 은평구을) 은평미래연대 대표 등 친박 인사를 공천하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비박계 중진인 대구 동구을의 유승민 의원과 서울 은평구을의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이들 5명의 공천장에 새누리당 대표의 직인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한 뒤 새누리당 당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급히 내려갔다. 대표 직인을 왕의 옥새에 비유해 당시 파동은 ‘옥새를 들고 달아났다’는 의미에서 ‘옥새런’ 사건으로 언론에서 회자됐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후 정종섭·추경호 후보자 공천안은 의결했지만 유영하·이재만·유재길 예비후보자는 결국 공천을 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은 무공천 지역이 됐다. 유승민·이재오 의원은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 의원은 당선됐고 이 의원은 낙선했다.

6)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그만둔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시 강남구병에 여성·청년 사업가 뒤편으로 우선(전략)공천을 했다가 철회한 김미균 시지운 대표를 둘러싸고 이른바 ‘문빠(적극적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한 책임이었다. 하지만 당내 계파 갈등과 함께 황교안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추진하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일부 공천에 대해 비판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으로 심각하게 드러나는 수준에까지 다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실제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갈등이 수면 아래에선 첨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국정기확상황실장과 고민정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핵심 인사는 전략공천을 받았다. 진문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공천을 받았다. 또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 비문계 중진 의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현역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친문 성향의 신인에게 패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⁷⁾

선거에 따라, 정당에 따라 표면화되는 강도는 다르지만 당내 계파 갈등은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그렇다 보니 각 정당은 공정하고 엄밀한 공천에 천착하기보다는 자기 세력 심기에 더 혈안이었다. 물론 공천 개혁 약속이 없었던 건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었다. 거대 양당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공천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도 공천 과정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 참여 경선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윤종빈, 2012).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한국의 정치 문화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공천 제도는 1954년 3대 총선 당시 자유당에 의해 최초로 도입됐다. 당시 공천방식은 하향식이었다. 이승만이라는 최고통치자의 권력을 유지·강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공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하향식 방식으로 시작되었던 한국의 공천 제

7)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강서구갑에서 재선을 노렸던 금태섭 의원이다. 금 의원은 당초 무난한 공천이 예상됐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하는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게 발목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에게 강한 비판을 받은 뒤 ‘조국 백서’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경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이른바 ‘조국 내전(內戰)’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지도부가 김 변호사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울에 전략공천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의 강선우 후보자에게 경선에서 패하면서 결국 재선이 좌절됐다.

도는 권위주의 시기를 거쳐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그 기본적인 틀이 유지됐다. 한 명의 정당 지도자 혹은 소수의 당내 계파 지도자에 의해 후보자 선정이 비밀리에 그리고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최준영, 2012; 심지연·김민전, 2006; 김용호, 2003).

그럼에도 총선이 거듭될수록 각 정당의 밀실공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둠의 장막 뒤에서 공천이 이뤄지면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자칫 총선 판도를 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정당은 경쟁력이 엇비슷한 공천 지원자가 복수인 경우 경선(競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야 낙천된 지원자도 납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 정당이 가장 손쉽게 활용하고 있는 공천 방식인 경선이 실제로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중에서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구 선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승패를 갈랐던 요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특히 공천 방식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21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 건 이미 시간이 지난 사례보다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시의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총선을 다뤘던 선행연구와 비교해 그 결론이 21대 총선에서도 유효한지를 따져보기에 유용하다.

21대 총선은 이전의 총선과는 다른 분절적 특성이 있다.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계가 탈당해 만든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 연대가 돌풍을 일으켰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이 선전했다.⁸⁾ 19대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성사되면서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자 대결로 선거가 진행됐다. 20대 총선에선 이른바 ‘안철수 돌풍’이 총선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자유선진당과 같은 충청권 기반의 정당과 달리 호남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 기반 정당의 약진으로 해석됐다.

21대 총선은 이전의 총선과는 다른 환경에서 치러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여야 일대일 구도가 사실상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反)문재인’ 성향의 야권 정당들이 선거 연대를 넘어 통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⁹⁾ 19대 총선 이후 활발했던 야권연대도 무산됐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¹⁰⁾의 도입과 이후 벌어진 위성정당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때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그러자 당초 이를 강하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맞대응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했

8)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는 18대 총선에서 각각 14석(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과 12석을 차지했다. 둘이 합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기준(20석)을 훌쩍 넘긴 26석에 달했다. 자유선진당도 18석(지역구 14석, 비례대표 4석)을 당선시켜 충청권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9)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시민사회 등이 합당해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은 2020년 2월 17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안철수 전 의원과 가까웠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일부 탈당해 합류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새누리당이 분열된 이후 3년 2개월여 만에 통합 보수 정당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1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 5개 정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27일 사상 최초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지역구에서의 야권연대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21대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해 국민의당을 다시 창당했지만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지역구에서 거대 양당을 위협할 정당도 사실상 사라졌다.

그런 만큼 이번 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표 1-1] 연구의 대상

구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	2020년 4월 15일
유형	지역구(비례대표는 제외)
정당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미래통합당(기호 2번)
후보	-더불어민주당(253명) -미래통합당(236명)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런 만큼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 지역에 공천한 후보자의 특성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다시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큰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가 현역

의원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해당 지역구에 몇 명의 후보자가 경쟁했는지, 해당 지역구가 전통적으로 어느 정당에 유리한 곳이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각 정당의 공천 방식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공천 방식을 경선, 전략공천(우선공천), 단수공천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theminjoo.kr)과 미래통합당(unitedfutureparty.kr)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을 참조했다. 또한 공천이 결정된 뒤에도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후보자가 막판에 바뀐 경우도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최종 후보자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최종 당선 여부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찾았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민주성과 효율성

민주성과 효율성¹¹⁾은 행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그런 이유로 행정학 교과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행정이념이기도 하다(선종근·하미승·전영상, 2013).

쉽게 말해 민주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총의와 떨어진 업무 수행은 민주성의 괴리를 의미한다.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으로 일을 하는 행정부가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걸 뜻한다.

이러한 민주성과 효율성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가치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때도 민주성과 효율성은 중요한 준거가 된다. 국회 또한 주권자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시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은 입법 과정의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된다(임중훈, 2017).

본 논문은 입법부의 예비 구성원, 즉 국회의원 후보자를 각 정당이 뽑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 민주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익숙한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정당 내 소수의 실력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하는 비민주적인 공천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전략공천 방식이 오히려 당선 가능성을 크게 한다는 믿음도 있다.

11) 능률성이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정 방식이 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을 높이는 결과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규범적 연구

정당의 공천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당의 공천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관해 다룬 규범적 연구와 실제 정당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핀 경험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는 공천 과정과 결과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지만 당선 이후 의정활동의 결과가 공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토한 연구도 존재한다.

1. 공천의 민주화

정치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정당의 공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천의 민주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공천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권력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걸 보면 공천의 민주화가 얼마나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였는지를 알 수 있다(길정아, 2011; Panebianco, 1988; Michels, 1915). 특히, ‘제왕적 총재(帝王的 總裁)’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밀실에서,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공천이 횡행했던 한국 정치에서 공천의 민주화는 그 자체로 절대 명제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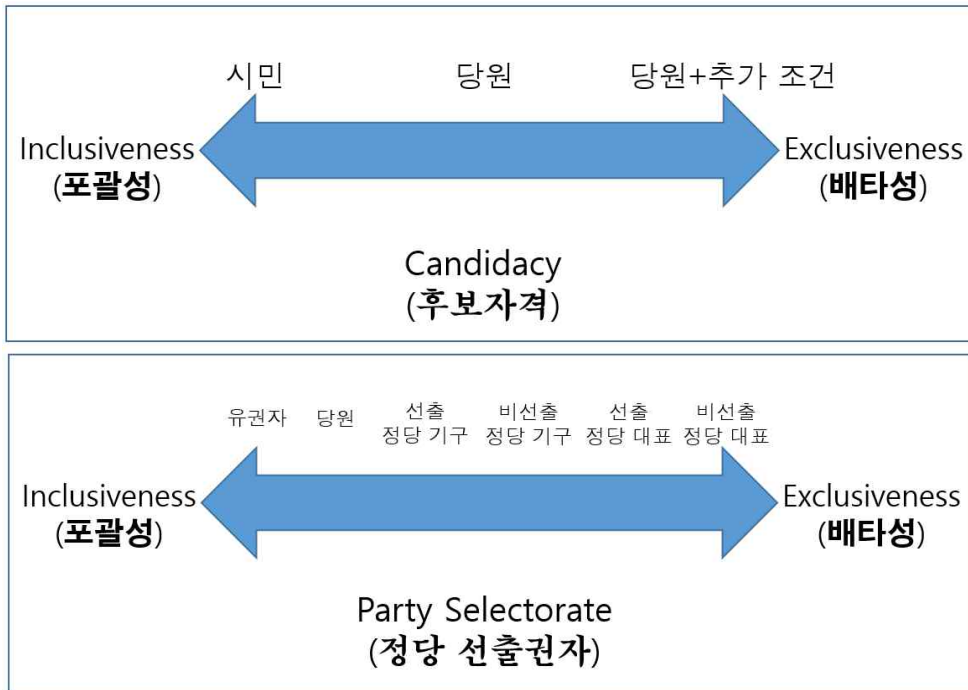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잘 읽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 내부질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공천은 정당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에게도 중요한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 정당 공천은 더 이상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정당 공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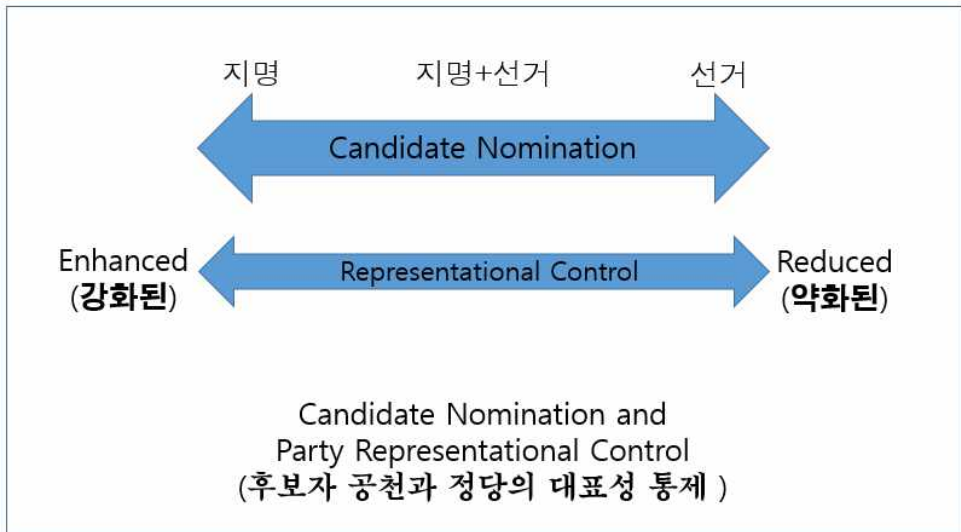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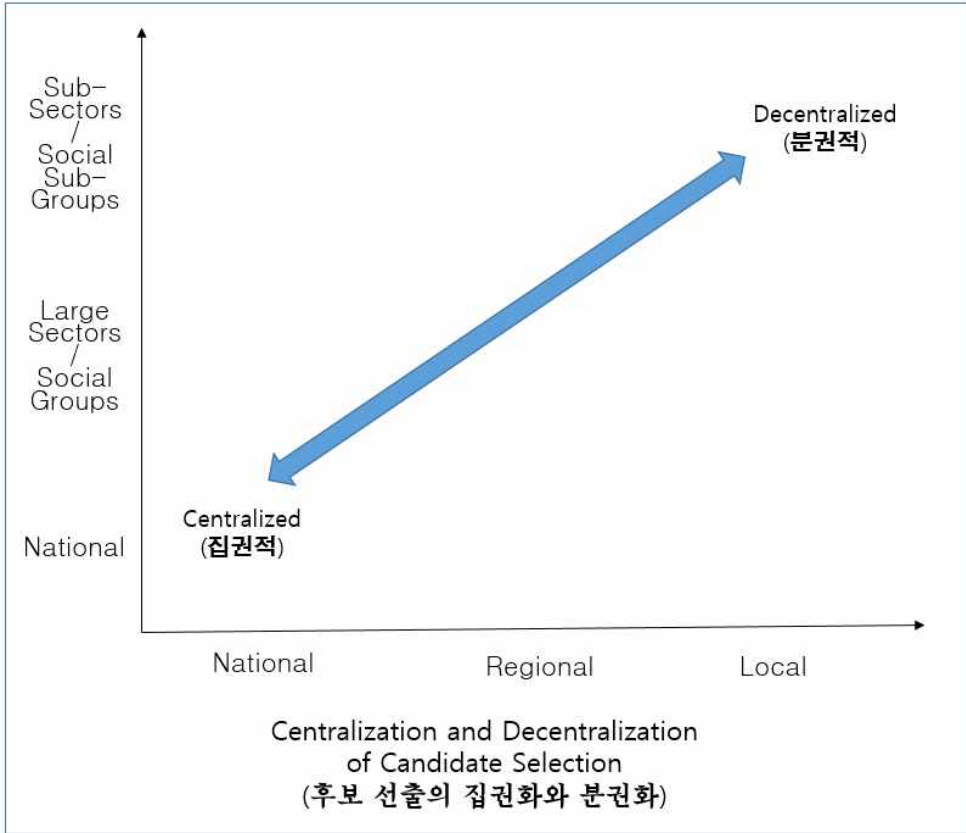
도 필요에 따라 입법·사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추세이고, 공천에 관한 분쟁과 판례도 늘고 있다(강승식, 2012).

정당이 어떠한 명분과 논리로 공천 제도를 설정해 합의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정당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 적실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공천을 하는 정당과 공천을 받는 후보자 모두 정통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당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조진만, 2012; Ware, 1996).

이렇듯 중요한 정당의 공천이 민주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드온 라हत(Gideon Rahat)과 르우벤 하잔(Reuven Hazan)은 공천 방식을 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그림 2-1] 라हत과 하잔의 공천 방식 분석틀





출처: Rahat and Hazan(2001) 인용

라함과 하잔의 분석들은 [그림 2-1]에 나타나듯이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공천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Rahat and Hazan, 2001). 라함과 하잔의 분석들을 쉽게 이해하면 누구나 정당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유권자 전체가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수록 포괄성(inclusiveness)이 높은, 즉 민주적인 공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보자 선출이 분권화가 될수록, 누군가에 의한 지명 방식보다는 선거에 의해 결정이 될수록 민주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가장 비민주적이고 배타적인 선출 방식은 정당의 지도자 등 소수가 공천 과정을 전담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장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은 투표를 통해 공직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한, 2014).

2.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과 문제점

현실의 정치에서 가장 민주적인 공천으로 꼽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¹²⁾ 방식이다. 정당의 대표나 실력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놓는 하향식 공천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당원이 아래서 위로 올려 보내는 상향식 공천의 모범적인 전형(典型)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는 받아들여지고 있다.¹³⁾

그런 이유로 한국의 각 정당은 매년 선거를 앞두고 상향식 공천에 의

12) 한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참여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 개방형 예비선거 등으로 번역돼 불린다.

13) 한국의 정치인 중 상당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치개혁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9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 정치, 계보 정치, 충성 서약 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내세우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신 정당 권력자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한나·박원호, 2016; 성치훈·진영재, 2016; 진영재, 2012; 윤종빈, 2012).

하지만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권위주의 시절부터 이어져온 ‘동원 선거’ 문화에 익숙한 유권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적 풍토가 현존하는 건 일종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정당의 예비선거에까지 유권자가 손수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하나의 선거구(전국)로 모을 수 있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총선의 경우 253개 지역구(21대 총선 기준) 모두에 유권자의 자발적인 열띤 참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안으로 많이 쓰이는 건 여론조사다.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을 한다’는 표현을 쓰면 대부분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표 2-1] 오픈 프라이머리와 여론조사 경선

구분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경선
대상	일반 국민(개방형)	일반 국민(개방형)
방식	투표	여론조사
참여	능동적 (본인 의지에 따른 참여)	수동적 (피조사자가 돼야 참여 가능)

하지만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인 여론조사 경선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는 1) 참여의 자발성과 결과에 대한 순응성이라

는 정치 참여의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지 않고 2) 검증받지 않은 대중적 인기인에게 유리해 정당 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3) 해당 정당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의견까지 반영해 당원의 정치적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4) 정확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측정 방식이기 때문이다(강원택, 2009).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상향식 공천 방식인 여론조사 경선을 비판만 하기는 어렵다. 실제 현실에서도 공천의 개방화와 민주화를 제고시키고, 무엇보다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천 방식으로서의 여론조사를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이론적 측면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학계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준영, 2012).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등과 같은 각 정당의 노력이 전개된다면 여론조사 경선은 대표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여론조사 공천의 활용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의 문제는 정당의 현실과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가치의 문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지 무조건적인 비판과 거부의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조진만, 2012).

어떠한 방식의 상향식 공천이냐를 떠나 정당에 속한 당원이 직접 공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는 2019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당원인식조사를 실시했고¹⁴⁾ 이정진(2019)의 논문에 그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는 [표 2-2]에 정리돼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당원들은 국민경선(경선 방식과 여론조사 방식을 포함, 53.7%), 당원 투표(25.1%), 완전국민경선(18.3%) 등 경선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전략공천이나 단수

14)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2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1,294명이다. 당원인식조사는 이들 1,294명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 이유, 바람직한 공천 방식, 정당별 당원의 이념성향, 당원 정당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이정진, 2019).

공천에는 반대했다. 또한 완전국민경선과 같이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당원의 권리가 인정되는 국민경선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진, 2019).

[표 2-2] 바람직한 후보자 공천 방법

단위: %

소속 정당	사례 (명)	국민참여경선 (당원+국민)	당원투표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768	31.1	23.9
자유한국당	284	22.9	28.9
바른미래당	77	19.2	25.9
민주평화당	44	39.9	28.9
정의당	62	28.3	30
기타	60	10.6	31.7
전체	1,294	27.8	25.9

출처: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이정진(2019) 재인용

이에 앞서 강원택(2008)은 일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당원들의 이념적·정책적 특성을 연구했다.¹⁵⁾

15) 한국정당학회가 2007년 상반기에 선거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당원 연수 과정에 참여한 각 정당의 당원 1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1653명의 참여자는 대통합민주신당(43.9%), 한나라당(36.2%), 민주노동당(6.4%), 민주당(8.5%), 국민중심당(5.1%)의 당원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64.7%와 34.4%였다(강원택, 2008).

[표 2-3] 정당의 정책 결정 권한에 대한 당원 평가 단위: %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누가 결정해야 하나?	누가 실제로 결정하고 있나?
고위당직자	7	40
국회의원	13.9	31.5
시도지부 간부	3.6	4.7
대의원	35.1	9.1
일반당원	31.3	6.6
기타	1.9	1
무응답	7.2	7.1
합계(명)	100(1653)	100(1653)

출처: 한국정당학회; 강원택(2008) 재인용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내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향식 의견 수렴의 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일반 당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표 2-3]에 제시돼 있듯이 당원들의 다수는 대의원 (35.1%)이나 당원(31.3%)이 정당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위 당직자(40%), 국회의원 (31.5%)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의 정당이 간부정당(cadre party)의 특징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이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당내 의

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다. 결국 당원은 자발적인 참여자이기보다는 개인적 연고나 조직에 의해 동원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강원택, 2008).

상향식 공천의 도입을 위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승식(2012)은 정당 공천은 더 이상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적 또는 사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런 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2항과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제도의 법제화는 현행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 오히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향식 공천이 절대선(絶對善)은 아니다. 상향식 공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을 소외시킴으로써 합목적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로서의 정당 조직을 약화시키고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 그리고 후보자와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을 정치의 장으로 부상시키기 때문에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전용주, 2010). 또한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 정당 민주화라는 대과제에서 당연한 지향점으로 가정하던 주장을 지양하고,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은희, 2012).

그동안의 연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천 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공천 제도를 주로 독립변수로 간주해 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종속변수로 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이든 지방선거이든 하향식 공천 방식과 상향식 공천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데, 왜 어떤 선거구에서는 하향식(상향식) 공천 방식이 아닌 상향식(하향식) 공천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최준영, 2012).

3. 규범적 연구의 한계

다양한 규범적 연구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많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 과정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가 어려웠다(Hazan and Rahat, 2010).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정당이나 선거제도 등을 다룬 연구에 비해 공천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적은 편이다(이정진, 2019).

실제 현실 정치에서 공천의 ‘결과’가 아닌 공천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의 공천 기준이 있을 뿐 실제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고, 그 기준에 따라 누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었는지 공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현역 의원을 컷오프(cut-off, 공천 원천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경우에 이러한 불투명성이 극대화된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본인이 원할 경우 자세한 결과를 알려주는 선에 그치고 일반 국민에게는 구체적 숫자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선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게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천 신청자가 공천에서 배제된 이유를 자세히 알리는 게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밀실공천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 3 절 경험적 연구

공천의 내밀한 결정 과정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얻기 힘든 한계 때문에 공천 연구는 주로 특정 시기의 선거, 즉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의 공천 방식과 공천 과정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정진, 2019).

1. 공천 과정에 대한 분석

총선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당내 경선은 2002년 12월 16대 대선 때 처음 실시됐다. 과거에는 정당 총재나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거의 혼자서 공천했고, 스스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곤 했다(이준한, 2014). 하지만 2002년의 경험 이후 당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치 문화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태(2004)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공천 방식과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당내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이 일부 도입되긴 했지만 17대 총선 공천은 폐쇄적인 비민주적인 공천이 주류를 이뤘다.

정진민(2004)은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도입한 상향식 공천의 실시 상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경우 상향식 공천의 도입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20대와 30대의 젊은 유권자 확보에 실패해 선거인단 대부분이 40대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중심으로 꾸러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평균 50% 정도의 선거인단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선거구에선 20%대에 머물렀다. 대표성이 저하되고, 일부 동원된 세력이 과대대표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해 1) 직접 투표장에 가는 방법 외에도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허용해 경선 참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2)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투표와 개표 관리, 경선 참여 안내문 발송 등의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경미(2008)와 길정아(2011)는 18대 총선에 나타난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분석했다. 18대 총선은 2002년 이후 확산되던 국민경선 대신 기존의 하향식 공천 방식이 여러 곳에서 부활했다.¹⁶⁾ 이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과거로 회귀된 모양새였다. 실제 공천 과정도 그랬다. 당원이 배제된 채 당내 인사와 외부 인사가 혼합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하고 추천했다. 그런 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결국 당내 최고 실력자인 당 대표가 공천을 최종적으로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이정진, 2019).

윤종빈(2012)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9대 총선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했다. 특히, 당시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¹⁷⁾ 양당 모두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돼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결국 해당 연구에서 드러난 점은 준비되지 않은 부실한 방식으로 공천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지율 하락과 당내 민주주의

16) 앞서 언급했지만 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4월 치러져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공천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경선과 같은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지지 세력을 끌어 모으기보다는 ‘내 사람 심기’를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 때문에 친이계와 친박계의 공천 갈등이 극심했고, ‘친박 공천 학살’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가 모여 만든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가 본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17)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선거 막판에 터진 ‘김용민 막말 파문’이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인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서울 노원구갑의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나섰지만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막말을 한 게 알려져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 문제는 결국 선거의 돌발변수가 돼 보수층의 결집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됐다. 두 번째, 야권연대의 혼선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서울 관악구를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논란은 보수표가 집결하는 계기가 됐다. 세 번째, 공천 논란의 여파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중도층 유권자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윤종빈, 2012).

의 악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2. 공천 결과에 대한 분석

총선 공천을 다룬 연구에서 두드러진 양상 중 하나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총선 공천과 선거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다. 단순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천이 됐고,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걸 정리해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각각의 공천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상향식 공천이 실제 선거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총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2004년 17대 총선 이후라고 볼 수 있다.¹⁸⁾ 김석우(2006)는 17대 총선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표 2-4]와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표 2-4] 17대 총선 연구의 가설 설정

	내 용
가설 1	연령이 높은 후보자가 연령이 낮은 후보자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가설 2	후보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18) 김석우(2004)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연령, 학력, 재산, 정치인 여부, 현직 여부 등 다섯 가지 요인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후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정치인과 현역 자치단체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도 도출했다. 하지만 후보자로 결정될 때 당내 경선을 치렀는지 여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선 당내 경선이 부각된 17대 총선에서야 비로소 분석이 시작했다.

가설 3	후보자의 재산이 많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가설 4	정치인들이 비정치인들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가설 5	현직 후보자는 비현직 후보자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가설 6	경선을 치른 후보자가 경선을 치르지 않은 후보자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김석우(2006) 인용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가설 1)과 정치인 여부(가설 4)는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가설 2), 재산이 많을수록(가설 3)¹⁹⁾, 현직 의원일수록(가설 5) 당선될 확률도 높았다. 흥미로운 건 경선을 거친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가설 6)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게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당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다.

이후 연구의 초점은 주로 총선에서 경선의 효과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모아졌다. 17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이 하향식 공천에 비해 당선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17대 이후의 총선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연구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18대 총선은 전체적인 공천 과정 자체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포괄성이 제거되고 지도부 중심의 공천이 부활됐다(박경미, 2008)는 평가를 받은 만큼 경선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19대와 20대 총선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연구의 결론은 엇갈렸다. 전용주·공영철(2012)은 19대 총선에서 경선이 본선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19) 상기 저자는 재산이 많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 데 대해 한국 선거가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을 썼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선 후보자와 비경선 후보자가 경합할 경우 경선 후보자가 1위, 비경선 후보자가 2위를 한 경우에 1위와 2위의 득표차가 가장 크다는 걸 근거로 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지지세가 강하고, 이러한 지역주의 균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지만 이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김한나·박원호, 2016; 박명호·차홍석, 2014).

박명호·차홍석(2014)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방식을 분류한 뒤 공천 유형에 따른 결과를 검증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단수공천은 득표율 제고에 기여한 반면 경선은 오히려 득표율을 하락시켰다. 그러나 이는 새누리당의 단수공천이 주로 이뤄진 곳은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영남이었던 반면 경선이 주로 진행된 곳은 새누리당 열세 지역인 수도권이었던 것과 연관돼 있다. 단순히 공천 방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결합된 결과였던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도 경선이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상향식 공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호남 지역과 연관돼 있었다. 결국 해당 연구에선 17대 총선에서 확인된 경선의 긍정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 2-5] 20대 총선의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당선율

	경선	비경선	t-test
전체	0.45	0.32	t=-3.46, p=0.0006
새누리당	0.44	0.40	t=-0.70, p=0.48
더불어민주당	0.53	0.45	t=-1.12, p=0.26
국민의당	0.37	0.09	t=-4.24, p=0.00

출처: 김한나·박원호(2016) 인용

김한나·박원호(2016)는 20대 총선의 사례를 대상으로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표 2-5]는 경선을 거친 후보자 집단과 비경선 후보자 집단 간의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경선 집단(0.45)이 비경선 집단(0.32)에 비해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p < 0.001$). 정당별로는 세 정당 모두에서 경선 집단의 당선 가능성이 더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국민의당의 경우에만 나타났다($p < 0.001$).

이 같은 결과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표 2-6]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세가 강한 영남에서만 유일하게 경선 집단(0.83)이 비경선 집단(0.59)에 비해 당선율이 높았다.

[표 2-6] 20대 총선의 지역별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당선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경선	비경선	경선	비경선	경선	비경선
수도권	0.24	0.36	0.67	0.68	0	0.02
영남	0.83	0.59	0	0.19	-	0
충청	0.31	0.81	0.4	0.45	0	0
호남	-	0.07	0.2	0.05	0.7	1
강원	0.06	1	0	0.16	-	0
제주	0	-	1	-	-	0
전체 평균	0.44	0.40	0.53	0.45	0.37	0.09
사례(명)	140	108	56	178	32	139

출처: 김한나·박원호(2016) 인용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만 그러한 차이가 발견됐다(경선 집단 0.2, 비경선 집단 0.05). 호남 지역구 의석을 쓸어 담듯 했던 국민의당은

비경선 집단 전원이 당선됐고, 경선 집단의 당선율도 0.7에 달했다. 결국 이러한 각 정당의 결과는 경선이 후보자 당선에 미치는 ‘보너스 효과(primary bonus)’가 지역주의 정당 균열과 상당 부분 중첩돼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중첩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정당과 지역주의 상호작용을 통제 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 경선의 보너스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²⁰⁾ 각각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을 대상으로 삼은 박명호·차홍석(2014)의 연구와 김한나·박원호(2016)의 연구 모두에서 하향식 공천에 비해 상향식 공천이 선거 결과에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론을 얻지는 못한 것이다.

3. 공천 유형에 따른 의정활동 분석

공천 방식에 따라 실제 의정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룬 연구도 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 기준은 정당이 아닌 국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오로지 양심에 따라 활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거나 정체성이 당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의원의 행위동기 중에 재선은 그 어떤 동기보다 선행한다(Mayhew, 1974).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 당 지도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건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받았는지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공천 유형에 따라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달라

20) 김한나·박원호(2016)는 그동안 본선 결과에 미치는 경선의 보너스 효과는 과대평가됐고, 후보자 당선에는 제도적 효과보다 후보자 개인의 선거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자신들의 핵심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지는 것이다. 실제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천 유형에 따른 의원의 투표행태를 조사한 결과 전략공천이 정당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대원, 2018). 선거에 나가기까지 후보 자신의 노력보다 정당의 배려가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전략공천의 경우 소속 정당의 방침을 충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후보자 명부 선순위에 오르는 순간 당선이 확실시 되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종속성은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하향식 공천제에서는 개별 의원들은 권력자가 정하는 당론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후보자들이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충성하게 되면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권력자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인해 정당 간 정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결국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은 정치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김재훈, 2016).

김재훈(2016)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향식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하향식 공천으로 금배지를 단 의원들보다 입법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국회에 처음 들어온 17대 국회의 초선 의원 중 열린우리당 소속 109명(상향식 경선 지역구 58명, 하향식 비경선 지역구 27명, 하향식 비례 24명)이 대표 발의한 1,949개 법안이 분석 대상이었다.²¹⁾

[표 2-7]에 나와 있듯이 상향식 경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가결률은 22.1%, 하향식 비경선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15.5%, 비례대표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12.4%로 나타났다. 상향식 경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이 하향식 비경선 의원이나 하향식 비례대표 의원의 법안 가결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각각의 가결률은 각각의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법안 가결률 평균

21) 소속 정당의 특성 및 선출 횟수에 따른 입법 생산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들 변수를 회귀분석에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보다 엄밀하게 통제하는 방법은 동일 정당의 초선 의원과 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자료를 제한해 표본 자체를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 109명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김재훈, 2016).

이다(김재훈, 2016).

[표 2-7] 의원별 법안 가결률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지역구	상향식 경선	58	0.221 (0.178)	0.023
	하향식 비경선	27	0.155 (0.114)	0.022
비례대표	하향식	24	0.124 (0.109)	0.022

출처: 17대 국회 입법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재훈(2016) 재인용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1대 총선의 본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시작됐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선거의 핵심적 주체인 정당과 후보자 본인을 기준으로 정당 내부의 요인(intra-party factors), 정당 외부의 요인(inter-party factors), 후보자 개인의 요인(characteristics of candidate factors)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정당 내부의 요인은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선 공천 유형에 따라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과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를 다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정당 내부의 요인

앞서 언급했듯이 공직후보자 추천은 정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존재의 이유로도 볼 수 있는 업무다. 정당의 계파 갈등, 분열의 시작은 결국 공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는 본래 정당과 정당, 후보자와 후보자의 싸움이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요인으로 거의 유일하게 꼽을 수 있는 게 공천이다.

그런 공천의 유형을 y , 공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x 라고 할 때 공천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 f(x_1, x_2, x_3, \dots x_i)$$

x_1 : 공천 경쟁	x_2 : 선거 전략
x_3 : 지역 특성	x_4 : 컨벤션 효과
x_5 : 당내 민주화	x_6 : 공천 후유증
x_7 : 공천 비용	x_8 : 유권자 선호
	⋮
x_{i-1}	x_i

각각의 x_i 가 y 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공천 신청자가 많아 공천 경쟁(x_1)이 치열할수록, 전통적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 특성(x_3)을 가진 곳일수록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경선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 x_4)를 기대할수록, 당내 민주화(x_5)의 정도가 높을수록, 후보자를 직접 뽑고 싶은 유권자의 선호(x_8)가 잘 반영될수록 경선을 치를 가능성은 역시 커진다.

반면 일반적으로 우세한 지역이 아니거나 상대 후보자가 강할 경우 맞춤형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 전략(x_2)을 쓸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우선공천)이나 단수공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공천 비용(x_7)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경선 가능성은 작아진다.

공천 후유증(x_6)을 고려하는 경우엔 쉽게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치열한 경선을 치를 경우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경선에서 탈락하면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 또 한 편으로는 특정 후보자를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원하던 지지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경선이든 아니든 어느 쪽을 택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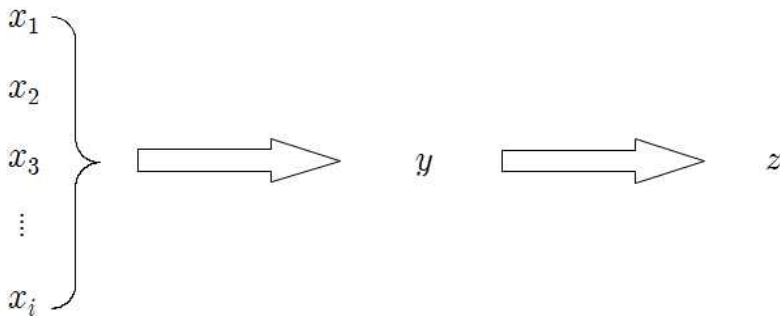
후보자를 경선으로 정하게 되면 $y=1$,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우선공천)

이나 단수공천을 하는 경우 $y=0$ 이라고 할 때 $x_1, x_2, x_3, \dots x_i$ 와 y 사이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x_1, x_3, x_4, x_5, x_8 &: \text{Corr}(x_i, y) > 0 \\ x_2, x_7 &: \text{Corr}(x_i, y) < 0 \\ x_6 &: \text{Corr}(x_i, y) = 0 \end{aligned}$$

z 는 본선 결과 또는 득표율이라고 할 때 $x_1, x_2, x_3, \dots x_i$ 와 y, z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로도(path diagram)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공천 영향 요인과 공천 유형, 선거 결과의 경로도



문제는 y 는 쉽게 관찰 가능한 반면 $x_1, x_2, x_3, \dots x_i$ 는 쉽게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잠재변수(latent variable)라는 점이다. 따라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y 가 z 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y 는 $x_1, x_2, x_3, \dots x_i$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y 는 z 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²²⁾

22) $x_1, x_2, x_3, \dots x_i$ 자체가 직접 z 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가령,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x_3 의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일 경우

잠재변수의 성격을 가진 각각의 $x_1, x_2, x_3, \dots x_i$ 가 y 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x_1, x_2, x_3, \dots x_i$ 의 대다수가 y 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독단적 결정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경선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과정을 종합해 보면 $x_1, x_2, x_3, \dots x_i$ 전체가 모여져서 y 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다시 z 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가설 1-1>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가설 1-2>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득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2. 정당 외부의 요인

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후보자의 숫자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많을수록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경쟁 구도에 국민의당이 뛰어들어 표가 분산되면서 승부가 갈린 수도권 지역구가 상당수 있

공천 신청자가 몰려 경선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할 가능성이 큰 동시에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뜻한다. 이 경우 y 는 매개변수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선 이러한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했다. 공천 유형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만큼 중요한 변수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경로도를 그리는 건 현상을 나타내는 모형을 집약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는 복잡한 경로도는 피해야 한다(강병서·김계수·오윤조, 1997).

었다. 경남 통영·고성의 경우 경쟁자가 없어서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이 되기도 했다. 후보자 숫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쟁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가설 2-1> 후보자가 많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다.

정당 간 대결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 문제다.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 프리미엄’이 전국을 휩쓸다시피 했다. 2020년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하는 선거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가 그랬듯이 집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동안의 실정(失政)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불리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총선 기간에도 고공행진을 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중요성도 커졌다. 결국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맞붙게 된 셈이다. 그래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2> 여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3. 후보자 개인의 요인

흔히 현실 정치에서 인물·구도·바람을 선거의 3요소로 꼽는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 서울 강북까지 ‘뉴타운 바람’이 불었던 2008년 18대 총선

은 선거에서 바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선거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힘도 못쓰고 끝난다”는 말은 이럴 때 쓴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2018년 지방선거는 옛 여권의 적폐(積弊)를 해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이 맞붙었다. 그래서 “적폐 청산”과 “위장 평화”의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바람과 구도 속에서도 선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후보자 개인의 인물 경쟁력이다. 험지에서 살아오는 후보자들을 보면 대개 평소 지역구 관리를 잘했거나 스스로가 거물급인 경우다. 정치 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에 비해 인물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미 많이 유권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홍보할 성과도 많은 현역에 비해 신인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김한나·박원호(2016)는 ‘현직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이미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선다는 점에서도 현직이 선거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현역 의원일수록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1대 총선의 각 지역구 선거에서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이다. 당선은 1, 낙선은 0으로 표시했다. 득표율은 실제 득표율로 표기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핵심적인 변수는 공천 유형이다. 특히, 일종의 예비선거인 경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그래서 경선이면 1, 전략공천(우선공천) 또는 단수공천과 같은 비경선이면 0으로 분류했다. 후보자의 숫자는 경쟁자가 1명이면 1, 2명이면 2, 3명이면 3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했다. 여당인 경우 1, 야당인 경우 0으로 표시를 했고 현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기했다.

3. 통제변수

해당 지역구가 어디에 있느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지인 대구·경북이 미래통합당에는 양지이고, 미래통합당에 불모지인 광주·전남이 더불어민주당에는 텃밭인 까닭이다. 박명호·차홍석(2014)과 김한나·박원호(2016)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균열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의 선거 경향은 단순히 호남과 영남으로 지역을 넓게 구분하기에는 양상이 복잡해졌다. 20대 총선의 경우 부산·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얻은 걸 보더라도 영남 전체를 특정 정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세 번의 선거인 18~20대 선거를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세 번 다 승리했으면 3, 두 번 승리했으면 2, 한 번 승리했으면 1, 한 번도 이기지 못했으면 0으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분구돼 신설된 선거구의 경우 분구 전 선거구의 결과를 따르되 모호한 경우 두 정당 모두 0을 부여였다. 또한 통·폐합된 선거구의 경우 통합 이전 선거구의 결과를 모두 고려하되 일부 지역만 조정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양당 모두 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했다.

20대 총선의 호남처럼 국민의당이 선전한 경우와 18대 총선의 영남처럼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가 선전한 경우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18·19대 총선 때 당선자를 배출한 자유선진당의 경우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합당했다. 그에 따라 18·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승리한 지역은 현재의 미래통합당 승리로 봤다. 다만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거부하고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자유선진당 의원이 승리한 지역구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집계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진 곳은 호남일 경우 민주통합당 몫으로, 다른 지역일 경우 통합진보당 몫으로 구분했다. 또한 공천을 못 받은 현직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에도 원 소속 정당이 승리한 것으로 분류했다.

후보자의 경력 중 출마하는 지역구의 전직 의원이었는지 여부와 해당 지역구와 중첩되는 행정구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을 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대면이나 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단체장 경력은 선거 때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소로 본다. 이를 고려해 해당 지역구의 전직 의원이었을 경우 1, 아니면 0으로, 전직 단체장이면 1, 아니면 0으로 각각 구분해 표기했다.²³⁾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분류했고, 나이는 나이를 그대로 표기했다. 학력은 유력 정당의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학사 이상의 학력²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통계를 하지 않았다. 재산의 경우에도 후보자 간 편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따로 분석에 고려하지 않았다.

23) 동일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을 경우 전직 의원으로 분류했다.

24) 21대 총선의 경우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졸업은 단 1명도 없었다. 대학교 재학 1명, 대학교 졸업 100명, 대학원 재학 1명, 대학원 수료 23명, 대학원 졸업 128명이었다.

제 3 절 연구의 모형

이상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

$$Y_i = \alpha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 \beta_6 X_{6i} + \beta_7 X_{7i} + \beta_8 X_{8i} + \beta_9 X_{9i} + \epsilon_i$$

Y_i : 당선 여부(당선 1, 낙선 0) or 득표율(%)

X_1 : 공천 유형(경선 1, 비경선 0)

X_2 : 경쟁자 수(1, 2, 3...)

X_3 : 여당 여부(여당 1, 야당 0)

X_4 : 현역 여부(현역 1, 비현역 0)

X_5 : 텃밭 여부(0, 1, 2, 3)

X_6 : 전직 여부(전직 1, 비전직 0)

X_7 : 단체장 여부(전직 1, 비전직 0)

X_8 : 성별(남성 1, 여성 0)

X_9 : 나이(25, 26, 27...)

제 4 장 기초 분석

제 1 절 공천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 [표 4-1]과 같은 각자의 심사 기준을 토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가 항목별로 구체적 반영 비율까지 공개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율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표 4-1] 공천 심사 기준 비교

구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도 여론조사(40%)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도 여론조사 -당무감사 결과 -원내대표의 의정활동 평가 -도덕성 -면접

출처: 각 정당 발표 자료 등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심사를 통해 적합한 후보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천 심사 뒤에도 후보자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경쟁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지역구 민심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짓는 경선을 하게 된다. 양당 모두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지만 세부적인 경선 기준은 [표 4-2]와 같다.

[표 4-2] 경선 방식 비교

구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경선 방식	<p>-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결과 합산</p> <p>-이 점수에서 정치 신인은 20%(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 가점</p> <p>-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경우에는 20% 감점</p> <p>-국회의원을 제외한 현직 선출직이면 25% 감점</p>	<p>-일반 국민 여론조사(100%)</p> <p>-이 점수에서 양자 대결을 기준으로 ▶25~34세 신인 20점, 비신인 15점 ▶35~39세 신인 15점, 비신인 10점 ▶40~44세 신인 10점, 비신인 7점 ▶45~59세 신인 7점, 비신인 0점 가산</p> <p>-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 출신, 국가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은 신인 10점, 비신인 5점 가산</p> <p>-여성 중 60세 이상은 신인 7점, 비신인 4점 가산</p> <p>-3자 대결의 경우 최소 4점에서 최대 10점, 4자 대결의 경우 최소 3점에서 최대 7점을 신인에게 가산</p>

출처: 각 정당 발표 자료 등

제 2 절 공천 유형

공천의 유형은 경선, 단수공천, 전략(우선)공천²⁵⁾ 등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쟁력이 비슷한 공천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공천 신청자가 있거나 소속 정당에 불리한 지역구여서 신청자 수가 거의 유일한 경우 ‘단수공천’을 하게 된다.

반면 현역 의원이 컷오프(cut-off, 공천 원천 배제) 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소속 정당에 매우 불리하거나 매우 유리한 지역, 경쟁력을 갖춘 마땅한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 등에는 ‘전략(우선)공천’을 하게 된다. 전략공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규 10호에는 “역대 선거 결과 분석 결과 절대 우세 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13조 2항 6호)이란 표현이 있다. 반면 우선추천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당규 28호에는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28조 2항 2호)이란 표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지역에 방점을 둔 반면 미래통합당은 약세 지역에 방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에 주로 전략(우선)공천이 이뤄지고,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가장 크게 일어난다.²⁶⁾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천 심사를 통해 내놓

25)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전략공천과 우선공천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임의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두 공천 방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6) 경선을 거친 경우에는 적어도 형식적인 공정성을 갖췄다는 명분을 얻게 되므로 공천 결과에 반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경선에서 패배하면 공직선거법 57조의 2 2항에 따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략(우선)공천으로 인해 공천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가 매년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일부 경쟁력 있는 후보자의 경우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돼 국회로 들어간 뒤 복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컷오프 뒤 당적을 바꿔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은 공천 결과는 [표 4-3]과 같다.²⁷⁾

[표 4-3]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유형

비율 단위: %

구분	경선		전략(우선)		단수		합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더불어민주당	103	40.7	31	12.3	119	47	253	100
미래통합당	84	35.6	27	11.4	125	53	236	100
합계	187	38.2	58	11.9	244	49.9	489	100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열세 지역인 대구·경북까지 모두 후보자를 공천해 253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자를 내세웠다. 그 중 경선은 103곳(40.7%), 전략공천은 31곳(12.3%), 단수공천은 119곳(47%)이었다.²⁸⁾²⁹⁾ 반면 미래통합당은 당세가 미약한 호남에서 16곳에 후보자를 내지 못해 12곳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³⁰⁾ 전체적으로는 236곳 중 경선 84곳

27) 공천 발표 뒤 선거구가 조정된 지역에 대해 각 당은 이미 정해진 후보자를 조정된 선거구에 맞게 다시 공천하면서 전략(우선)공천 형식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이런 경우에 선거구 조정 전 공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다만 선거구가 겹쳐 경선을 한 경우에는 경선으로 구분했다.

28)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비율은 20대 총선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김한나·박원호(2016)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때 234개 선거구 중 56곳(23.93%)에서 경선을 치렀고, 나머지 178곳(76.07%)에선 단수공천과 전략공천 방식을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전략을 폈다. 이 때문에 19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공천 유형 비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9) 경선으로 후보자를 확정된 뒤 후보자를 교체하면서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은 경우 ‘단수공천’으로 분류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문체가 생겨서 순위와 상관없이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경선’으로 구분했다.

30) 후보자 추천은 13곳을 했지만 한 곳(전남 나주시·화순군)에서는 후보자 등

(35.6%), 우선공천 27곳(11.4%), 단수공천 125곳(53%)이었다.³¹⁾³²⁾ 양당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공천 유형에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았다. 전략(우선)공천 비율은 거의 똑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비율이 조금 더 높은 대신 미래통합당의 단수공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후보자 공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4-4]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공천 유형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전략		단수		합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도권	서울	16	32.7	8	16.3	25	51	49	100
	인천	3	23.1	0	0	10	76.9	13	100
	경기	27	45.8	11	18.6	21	35.6	59	100
	소계	46	38	19	15.7	56	46.3	121	100
대구·경북	대구	2	16.7	2	16.7	8	66.7	12	100
	경북	3	23.1	2	15.4	8	61.5	13	100

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곳으로 처리했다.

31) 미래통합당의 경선 비율은 20대 총선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김한나·박원호(2016)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때 248개 선거구 중 140곳(56.45%)에서 경선을 치렀고, 나머지 108곳(43.55%)에선 단수공천과 우선공천 방식을 사용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많은 곳에서 경선을 실시해 나타난 결과였다. 19대 총선에 비해선 경선 비율이 상승했다. 박명호·차홍석(2014)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때 230개 선거구 중 48곳(20.9%)에서 경선을 했고,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은 각각 52곳(22.6%), 130곳(56.5%)이었다.

32) 미래통합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대호(서울 관악구갑) 후보자와 차명진(경기 부천시병) 후보자를 제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차명진 후보자의 ‘제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한 까닭에 본 논문에서는 차명진 후보자를 포함해 통계를 냈다.

	소계	5	20	4	16	16	64	25	100
부산·경남	부산	4	22.2	2	11.1	12	66.7	18	100
	울산	5	83.3	0	0	1	16.7	6	100
	경남	5	31.3	2	12.5	9	56.3	16	100
	소계	14	35	4	10	22	55	40	100
호남	광주	6	75	0	0	2	25	8	100
	전북	6	60	0	0	4	40	10	100
	전남	8	80	1	10	1	10	10	100
	소계	20	71.4	1	3.6	7	25	28	100
충청	대전	4	57.1	0	0	3	42.9	7	100
	세종	1	50	1	50	0	0	2	100
	충북	4	50	0	0	4	50	8	100
	충남	4	36.4	0	0	7	63.6	11	100
	소계	13	46.4	1	3.6	14	50	28	100
강원		4	50	1	12.5	3	37.5	8	100
제주		1	33.3	1	33.3	1	33.3	3	100
합계		103	40.7	31	12.3	119	47	253	100

[표 4-5]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공천 유형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우선		단수		합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도권	서울	15	31.3	8	16.7	25	52.1	48	100
	인천	5	38.5	3	23.1	5	38.5	13	100
	경기	14	23.7	9	15.3	36	61	59	100

	소계	34	28.3	20	16.7	66	55	120	100
대구·경북	대구	5	41.7	1	8.3	6	50	12	100
	경북	8	61.5	0	0	5	38.5	13	100
	소계	13	52	1	4	11	44	25	100
부산·경남	부산	10	55.6	2	11.1	6	33.3	18	100
	울산	5	83.3	0	0	1	16.7	6	100
	경남	8	50	1	6.3	7	43.8	16	100
	소계	23	57.5	3	7.5	14	35	40	100
호남	광주	0	0	0	0	2	100	2	100
	전북	0	0	0	0	4	100	4	100
	전남	0	0	0	0	6	100	6	100
	소계	0	0	0	0	12	100	12	100
충청	대전	2	28.6	0	0	5	71.4	7	100
	세종	0	0	2	100	0	0	2	100
	충북	2	25	0	0	6	75	8	100
	충남	5	45.5	0	0	6	54.5	11	100
	소계	9	32.1	2	7.1	17	60.7	28	100
강원		2	25	1	12.5	5	62.5	8	100
제주		3	100	0	0	0	0	3	100
합계		84	35.6	27	11.4	125	53	236	100

[표 4-6]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공천 유형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전략(우선)		단수		합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도권	서울	31	32	16	16.5	50	51.5	97	100
	인천	8	30.8	3	11.5	15	57.7	26	100
	경기	41	34.7	20	16.9	57	48.3	118	100
	소계	80	33.2	39	16.2	122	50.6	241	100
대구·경북	대구	7	29.2	3	12.5	14	58.3	24	100
	경북	11	42.3	2	7.7	13	50	26	100
	소계	18	36	5	10	27	54	50	100
부산·경남	부산	14	38.9	4	11.1	18	50	36	100
	울산	10	83.3	0	0	2	16.7	12	100
	경남	13	40.6	3	9.4	16	50	32	100
	소계	37	46.3	7	8.8	36	45	80	100
호남	광주	6	60	0	0	4	40	10	100
	전북	6	42.9	0	0	8	57.1	14	100
	전남	8	50	1	6.3	7	43.8	16	100
	소계	20	50	1	2.5	19	47.5	40	100
충청	대전	6	42.9	0	0	8	57.1	14	100
	세종	1	25	3	75	0	0	4	100
	충북	6	37.5	0	0	10	62.5	16	100
	충남	9	40.9	0	0	13	59.1	22	100
	소계	22	39.3	3	5.4	31	55.4	56	100
강원		6	37.5	2	12.5	8	50	16	100
제주		4	66.7	1	16.7	1	16.7	6	100
합계		187	38.2	58	11.9	244	49.9	489	100

양당의 지역별 공천 유형의 특징은 지지층이 견고한 곳에서 주로 경선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의 경선 비율은 71.4%(20곳)에 달한다. 반면 호남 전체에서 전략공천은 한 곳(3.6%)³³⁾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의 경선 비율은 각각 52%, 57.5%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의 우선공천은 각각 1곳(4%)³⁴⁾, 3곳(7.5%)에 그쳤다.

제 3 절 선거 결과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미래통합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는 싹쓸이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의석수(121석)가 걸린 수도권에서 103곳을 가져갔고 호남도 석권했다. 지역구 선거만으로도 과반을 훌쩍 넘는 16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까지 합해 전체 300석 중 180석을 얻는 대승을 했다.³⁵⁾³⁶⁾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19석)까지 합해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유형별 지역구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비율’은 각 유형별 후보자 중 당선된 비율을 나타내는 ‘당선율’을 뜻한다.

33)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영입한 뒤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34) 미래통합당은 대구 수성구갑의 현역 의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바로 옆 지역구인 수성구을의 4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수성구갑에 우선공천했다.

35)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헌법 개정안 의결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모든 의결을 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다.

36)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단일 정당이 얻은 가장 많은 의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단일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이기도 하다.

[표 4-7]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결과(당락)

비율 단위: %

구분	경선		전략(우선)		단수		전체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더불어민주당	73	70.9	20	64.5	70	58.8	163	64.4
미래통합당	39	46.4	9	33.3	36	28.8	84	35.6
합계	112	59.9	29	50	106	43.4	247	50.5

[표 4-8]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결과(득표율)

비율 단위: %

구분	경선	전략(우선)	단수	전체
더불어민주당	52.5	45.62	49.35	50.17
미래통합당	47.13	43.24	42.18	44.06
합계	50.09	44.51	45.68	47.23

[표 4-7]과 [표 4-8]에 나타나듯이 경선으로 후보자가 된 경우 전략(우선)공천이나 단수공천 후보자에 비해 당선율과 득표율이 모두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정당을 합한 경우뿐 아니라 각각 정당별로 살펴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천 유형별로만 본다면 경선을 거친 경우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유형별 선거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9]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당락)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전략		단수		전체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수도권	서울	14	87.5	6	75	21	84	41	83.7
	인천	2	66.7	-	-	9	90	11	84.6
	경기	22	81.5	10	90.9	19	90.5	51	86.4
	소계	38	82.6	16	84.2	49	87.5	103	85.1
대구·경북	대구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부산·경남	부산	0	0	0	0	3	25	3	16.7
	울산	1	20	-	-	0	0	1	16.7
	경남	1	20	1	50	1	11.1	3	18.8
	소계	2	14.3	1	25	4	18.2	7	17.5
호남	광주	6	100	-	-	2	100	8	100
	전북	5	83.3	-	-	4	100	9	90
	전남	8	100	1	100	1	100	10	100
	소계	19	95	1	100	7	100	27	96.4
충청	대전	4	100	-	-	3	100	7	100
	세종	1	100	1	100	-	-	2	100
	충북	2	50	-	-	3	75	5	62.5
	충남	4	100	-	-	2	28.6	6	54.5
	소계	11	84.6	1	100	8	57.1	20	71.4
강원		2	50	0	0	1	33.3	3	37.5

제주	1	100	1	100	1	100	3	100
합계	73	70.9	20	64.5	70	58.8	163	64.4

[표 4-10]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득표율)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전략	단수	전체
수도권	서울	54.56	50.03	54.19	53.63
	인천	46.3	-	55.24	53.17
	경기	53.41	50.73	56.62	54.05
	소계	53.35	50.44	55.29	53.79
대구·경북	대구	27.54	21.8	30.08	28.27
	경북	26.61	16.82	26.65	25.13
	소계	26.98	19.31	28.36	26.64
부산·경남	부산	42.58	42.87	45.13	44.31
	울산	37.71	-	43.4	38.66
	경남	39.41	45.49	35.14	37.77
	소계	39.71	44.18	40.96	40.85
호남	광주	74.33	-	79.98	75.74
	전북	65.27	-	65.58	65.4
	전남	66.95	58.56	81.95	67.61
	소계	68.66	58.56	72.03	69.14
충청	대전	51.64	-	56.53	53.74
	세종	57.96	56.45	-	57.2
	충북	45.75	-	51.1	48.42
	충남	49	-	50.27	49.81

	소계	49.5	56.45	51.85	50.92
강원		47.61	38.4	45.23	45.57
제주		55.35	48.7	55.48	53.18
합계		52.5	45.62	49.35	50.17

[표 4-11]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당락)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우선		단수		전체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수도권	서울	2	13.3	4	50	2	8	8	16.7
	인천	0	0	0	0	1	20	1	7.7
	경기	1	7.1	1	11.1	5	13.9	7	11.9
	소계	3	8.8	5	25	8	12.1	16	13.3
대구·경북	대구	4	80	1	100	6	100	11	91.7
	경북	8	100	-	-	5	100	13	100
	소계	12	92.3	1	100	11	100	24	96
부산·경남	부산	9	90	2	100	4	66.7	15	83.3
	울산	5	100	-	-	0	0	5	83.3
	경남	6	75	0	0	6	85.7	12	75
	소계	20	87	2	66.7	10	71.4	32	80
호남	광주	-	-	-	-	0	0	0	0
	전북	-	-	-	-	0	0	0	0
	전남	-	-	-	-	0	0	0	0
	소계	-	-	-	-	0	0	0	0
충청	대전	0	0	-	-	0	0	0	0

	세종	-	-	0	0	-	-	0	0
	충북	1	50	-	-	2	33.3	3	37.5
	충남	2	40	-	-	3	50	5	45.5
	소계	3	33.3	0	0	5	29.4	8	28.6
강원		1	50	1	100	2	40	4	50
제주		0	0	-	-	-	-	0	0
합계		39	46.4	9	33.3	36	28.8	84	35.6

[표 4-12]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득표율)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우선	단수	전체
수도권	서울	40.49	50.18	42.13	42.96
	인천	39.5	34.06	41	38.83
	경기	39.64	37.48	42.64	41.14
	소계	40	42.05	42.32	41.62
대구·경북	대구	57	59.81	62.2	59.83
	경북	62.56	-	61.5	61.15
	소계	60.42	59.81	61.88	61.04
부산·경남	부산	53.41	50.27	52.43	52.73
	울산	51.4	-	40.89	49.65
	경남	52.4	41.61	56.16	53.37
	소계	52.62	47.38	53.47	52.53
호남	광주	-	-	3.29	3.29
	전북	-	-	5.49	5.49
	전남	-	-	3.41	3.41

	소계	-	-	4.08	4.08
충청	대전	38.89	-	45.02	43.27
	세종	-	36.24	-	36.24
	충북	50.97	-	47.88	48.65
	충남	41.99	-	47.79	45.15
	소계	43.29	36.24	47	45.04
강원		45.89	52.07	40.5	43.29
제주		40.5	-	-	40.5
합계		47.13	43.24	42.18	44.06

[표 4-13]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당락)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전략(우선)		단수		전체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당선	비율
수도권	서울	16	51.6	10	62.5	23	46	49	50.5
	인천	2	25	0	0	10	66.7	12	46.2
	경기	23	56.1	11	55	24	42.1	58	49.2
	소계	41	51.3	21	53.8	57	46.7	119	49.4
대구·경북	대구	4	57.1	1	33.3	6	42.9	11	45.8
	경북	8	72.7	0	0	5	38.5	13	50
	소계	12	66.7	1	20	11	40.7	24	48
부산·경남	부산	9	64.3	2	50	7	38.9	18	50
	울산	6	60	-	-	0	0	6	50
	경남	7	53.8	1	33.3	7	43.8	15	46.9
	소계	22	59.5	3	42.9	14	38.9	39	48.8

호남	광주	6	100	-	-	2	50	8	80
	전북	5	83.3	-	-	4	50	9	64.3
	전남	8	100	1	100	1	14.3	10	62.5
	소계	19	95	1	100	7	36.8	27	67.5
충청	대전	4	66.7	-	-	3	37.5	7	50
	세종	1	100	1	33.3	-	-	2	50
	충북	3	50	-	-	5	50	8	50
	충남	6	66.7	-	-	5	38.5	11	50
	소계	14	63.6	1	33.3	13	41.9	28	50
강원		3	50	1	50	3	37.5	7	43.8
제주		1	25	1	100	1	100	3	50
합계		112	59.9	29	50	106	43.4	247	50.5

[표 4-14]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별 선거 결과(득표율)

비율 단위: %

지역		경선	전략(우선)	단수	전체
수도권	서울	47.75	50.1	48.16	48.35
	인천	42.05	34.06	50.5	46
	경기	48.71	44.77	47.79	47.6
	소계	47.67	46.13	48.27	47.73
대구·경북	대구	48.58	34.47	43.85	44.05
	경북	52.75	16.82	40.05	43.64
	소계	51.13	27.41	42.02	43.84
부산·경남	부산	50.31	46.57	47.56	48.52
	울산	44.56	-	42.15	44.16

	경남	47.41	44.19	44.33	45.57
	소계	47.74	45.55	45.83	46.69
호남	광주	74.33	-	41.63	61.25
	전북	65.27	-	35.54	48.28
	전남	66.95	58.56	14.63	43.54
	소계	68.66	58.56	29.12	49.63
충청	대전	47.39	-	49.34	48.5
	세종	57.96	42.97	-	46.72
	충북	47.49	-	49.16	48.53
	충남	45.11	-	49.12	47.48
	소계	46.96	42.97	49.19	47.98
강원		47.03	45.24	42.28	44.43
제주		44.21	48.7	55.48	46.84
합계		50.09	44.51	45.68	47.23

두 정당의 선거 결과를 각각 지역별로 단순하게 살펴보면 경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후보자가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선거에 나선 후보자보다 당선율이 높거나 득표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서울·경기·인천 선거에서도 일방적 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정당을 합해서 지역별로 볼 경우에는 경선 방식의 효율성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강원에서 경선 방식의 당선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강원에서 경선 방식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결국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순 통계를 넘어서는 심층적인 방식의 분석이 필요하다.

제 5 장 심층 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공천 유형에 따른 선거 결과의 차이를 기술통계로 확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천 유형은 경선, 전략(우선)공천, 단수공천으로 나뉜다. 하지만 전략(우선)공천과 단수공천은 실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현직 의원을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하거나 기존 공천 신청자를 배제한 뒤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 각 당이 전략(우선)공천과 단수공천이라는 명칭을 혼용해 사용한 까닭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공천 유형을 ‘경선’과 ‘비경선’의 두 방식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표 5-1]과 [표 5-2]에 제시됐듯이 경선 집단은 비경선 집단에 비해 전체적으로나 각 정당별로나 당선율과 득표율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당선율

당선율 단위: %			
구분	경선	비경선	t-test
전체	59.9	44.7	t=-3.2946, p=0.0011*
더불어민주당	70.9	60	t=-1.779, p=0.0764
미래통합당	46.4	29.6	t=-2.6107, p=0.0096*

(*: $p < 0.05$)

[표 5-2] 경선 집단과 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득표율 단위: %

구분	경선	비경선	t-test
전체	50.09	45.45	t=-3.777, p=0.0002*
더불어민주당	52.5	48.58	t=-2.4193, p=0.0163*
미래통합당	47.13	42.37	t=-2.6728, p=0.0081*

(*: p < 0.05)

특히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전체 등 세 가지 모든 경우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p-value)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당선율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도 본선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표 5-3]과 [표 5-4]에 나타나듯이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당선율과 득표율 모두 현역 후보자가 비현역 후보자를 압도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표 5-3] 현역 집단과 비현역 집단 간 당선율

당선율 단위: %

구분	현역	비현역	t-test
전체	77.5	39.5	t=-8.1079, p=0.0000*
더불어민주당	89.7	51.2	t=-6.5387, p=0.0000*
미래통합당	58.2	28.7	t=-4.12, p=0.0001*

(*: p < 0.05)

[표 5-4] 현역 집단과 비현역 집단 간 득표율

득표율 단위: %

구분	현역	비현역	t-test
전체	54.08	44.42	t=-7.6802, p=0.0000*
더불어민주당	56.06	47.09	t=-5.6091, p=0.0000*
미래통합당	50.95	41.97	t=-4.5859, p=0.0000*

(*: p < 0.05)

폐쇄적인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여성이 지역구 후보자로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남성(432명) 후보자의 숫자가 여성(57명) 후보자를 압도하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런 정치 문화 속에서도 후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표 5-5]와 [표 5-6]에서 보이듯이 정당별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당선율과 득표율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

[표 5-5] 남성과 여성 간 당선율

당선율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t-test
전체	50.7	49.1	t=-0.2226, p=0.8239
더불어민주당	64.4	64.5	t=0.011, p=0.9912
미래통합당	36.2	30.8	t=-0.5426, p=0.5879

(*: p < 0.05)

[표 5-6] 남성과 여성 간 득표율

득표율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t-test
전체	47.42	45.73	t=-0.8964, p=0.3705
더불어민주당	50.62	46.96	t=-1.4966, p=0.1358
미래통합당	44.04	44.27	t=0.0838, p=0.9333

(*: p < 0.05)

[표 5-7]과 [표 5-8]에 적혀 있듯이 해당 지역구와 겹치는 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후보자 집단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 집단에 비해 당선율과 득표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5-7] 전직 단체장 집단과 비전직 단체장 집단 간 당선율

당선율 단위: %

구분	단체장	비단체장	t-test
전체	52.2	50.3	t=-0.2365, p=0.8131
더불어민주당	70.6	64	t=-0.5476, p=0.5845
미래통합당	41.4	34.8	t=-0.6926, p=0.4892

(*: p < 0.05)

[표 5-8] 전직 단체장 집단과 비전직 단체장 집단 간 득표율

득표율 단위: %

구분	단체장	비단체장	t-test
----	-----	------	--------

전체	50.21	46.91	t=-1.5965, p=0.111
더불어민주당	55.99	49.76	t=-1.9516, p=0.0521
미래통합당	46.83	43.68	t=-1.2002, p=0.2313

(*: p < 0.05)

해당 선거구에서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냈는지 여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여겨진다. 유권자에게 이미 이름을 알려 인지도가 높은 까닭에 당선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후보자의 신선도가 떨어져 결과에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표 5-9]와 [표 5-10]에서 드러난 점은 전직 의원이었던 이력이 본선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경우 전직 의원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선율이나 득표율이 모두 더 높았다. 특히 득표율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총선 당시 호남에서 붙었던 국민의당 열풍으로 낙선했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사례(6명)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9] 전직 의원 집단과 비전직 의원 집단 간 당선율

당선율 단위: %

	전직	비전직	t-test
전체	45.5	50.9	t=0.6006, p=0.5484
더불어민주당	83.3	63.5	t=-1.4016, p=0.1623
미래통합당	23.8	36.7	t=1.1801, p=0.2392

(*: p < 0.05)

[표 5-10] 전직 의원 집단과 비전직 의원 집단 간 득표율

득표율 단위: %

	전직	비전직	t-test
전체	50.25	47.01	t=-1.3484, p=0.1781
더불어민주당	60.25	49.67	t=-2.8356, p=0.0049*
미래통합당	44.54	44.02	t=-0.171, p=0.8644

(*: $p < 0.05$)

제 2 절 가설의 검증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야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논문에서는 당선 여부(당선 1, 낙선 0)와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삼았다. 공천 유형(경선 1, 비경선 0), 경쟁자 수(1, 2, 3…), 여당 여부(여당 1, 야당 0), 현역 여부(현역 1, 비현역 0)는 독립변수다. 그밖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텃밭 여부(0, 1, 2, 3), 전직 국회의원 여부(전직 1, 비전직 0),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여부(전직 1, 비전직 0), 성별(남성 1, 여성 0), 나이(25, 26, 27…)는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본 논문의 연구 모형은 종속변수를 당선 여부로 하느냐, 득표율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나머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한 회귀 모형이 다르다. 득표율은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한 반면 당선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했다. 종속변수인 당선 여부가 당선(1)과 낙선(0)이라는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이다.

두 모형 모두 분석 절차는 같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한 결과가 [표 5-11]에서부터 [표 -16]에 걸쳐 제시돼 있다.

1. 정당 내부의 요인

두 정당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 5-11]과 [표 5-14]를 보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는 <가설 1-1>과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득표율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1-2>를 검증할 수 있다.

먼저,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1]을 보면 공천 유형의 승산비(odds ratio)는 1.941이다. 즉, 경선을 치르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에 비해 경선을 치른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1.941배다. 이러한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p-value)이 0.05보다 작은 0.019여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가설 1-1>이 지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어서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4]를 보면 공천 유형의 회귀계수는 2.401이다.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공천 유형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득표율은 2.401 단위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선 후보자는 비경선 후보자에 비해 2.401%p 더 득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1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가설 1-2>가 지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표 5-11]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표준오차	z	p-value
공천 유형	1.941*	0.549	2.34	0.019*
정당	32.643*	14.097	8.07	0.000*
현역	1.694	0.557	1.6	0.109
성별	0.984	0.410	-0.04	0.97
전직 단체장	0.707	0.333	-0.74	0.462
전직 의원	1.096	0.658	0.15	0.878
나이	0.992	0.020	-0.34	0.735
경쟁자 수	1.038	0.117	0.33	0.741
텃밭	7.102*	1.391	10.01	0.000*
상수	0.009*	0.011	-3.63	0.000*

N=489, Pseudo $R^2=0.4652$ (*: $p < 0.05$)

[표 5-12] 더불어민주당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표준오차	z	p-value
공천 유형	2.748*	1.123	2.48	0.013*
정당	1	-	-	-
현역	3.690*	1.863	2.59	0.01*
성별	0.699	0.403	-0.62	0.535
전직 단체장	2.203	1.801	0.97	0.334
전직 의원	1.647	2.120	0.39	0.698
나이	0.973	0.028	-0.93	0.355
경쟁자 수	1.053	0.162	0.34	0.736
텃밭	6.559*	1.933	6.38	0.000*
상수	0.780	1.329	-0.15	0.885

N=253, Pseudo $R^2=0.4554$ (*: $p < 0.05$)

[표 5-13] 미래통합당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표준오차	z	p-value
공천 유형	1.373	0.566	0.77	0.442
정당	1	-	-	-
현역	0.797	0.365	-0.49	0.622
성별	1.625	1.051	0.75	0.453
전직 단체장	0.407	0.231	-1.58	0.115
전직 의원	0.747	0.526	-0.41	0.68
나이	1.023	0.031	0.77	0.444
경쟁자 수	1.042	0.166	0.26	0.797
텃밭	7.737*	2.117	7.48	0.000*
상수	0.001*	0.002	-3.45	0.001*

N=236, Pseudo $R^2=0.4318$ (*: $p < 0.05$)

[표 5-14]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천 유형	2.401*	0.925	2.59	0.01*
정당	8.767*	0.899	9.75	0.000*
현역	2.830*	1.109	2.55	0.011*
성별	0.826	1.360	0.61	0.544
전직 단체장	0.996	1.522	0.65	0.513
전직 의원	3.085	1.773	1.74	0.082
나이	-0.046	0.060	-0.77	0.44
경쟁자 수	-1.019*	0.354	-2.87	0.004*
텃밭	6.957*	0.413	16.82	0.000*
상수	35.834*	3.628	9.88	0.000*

N=489, F=55.06, p=0.000, Adj R^2 =0.4992 (*: p < 0.05)

[표 5-15]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천 유형	3.131*	1.169	2.68	0.008*
정당	0	-	-	-
현역	4.417*	1.358	3.25	0.001*
성별	1.232	1.700	0.72	0.469
전직 단체장	4.449*	2.246	1.98	0.049*
전직 의원	5.535*	2.695	2.05	0.041*
나이	-0.062	0.084	-0.74	0.457
경쟁자 수	-0.686	0.457	-1.5	0.135
텃밭	6.901*	0.524	13.16	0.000*
상수	42.872*	4.873	8.8	0.000*

N=253, F=38.04, p=0.000, Adj R^2 =0.5404 (*: p < 0.05)

[표 5-16] 미래통합당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천 유형	1.773	1.469	1.21	0.229
정당	0	-	-	-
현역	1.364	1.852	0.74	0.462
성별	0.244	2.200	0.11	0.911
전직 단체장	-0.880	2.129	-0.41	0.68
전직 의원	1.351	2.438	0.55	0.58
나이	-0.017	0.088	-0.2	0.841
경쟁자 수	-1.230*	0.557	-2.21	0.028*
텃밭	6.967*	0.664	10.49	0.000*
상수	36.382*	5.314	6.85	0.000*

N=236, F=20.77, p=0.000, Adj R^2 =0.4023 (*: p < 0.05)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선 전체가 아닌 정당별로 나누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가설을 더 명확히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12]와 [표 5-13]은 정당별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고 [표 5-15]와 [표 5-16]은 정당별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2]를 보면 공천 유형의 승산비는 2.748이다.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13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모형의 설명력(Pseudo R^2)은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0.4652)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0.4554)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승산비는 전체가 대상인 경우(1.941)에 비해 커졌다. 경선을 치르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에 비해 경선을 치른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만 놓고 봤을 때 그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다. <가설 1-1>이 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3]을 보면 공천 유형의 승산비는 1.373이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0.442여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바꿔 말하면 <가설 1-1>이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5]를 보자. 공천 유형의 회귀계수는 3.131이고,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08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가설 1-2>가 지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6]을 보면 공천 유형의 회귀계수는 1.773이다. 이러한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0.229여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가설 1-2>가 지지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가설을 지지하지만 정당별로는 가설 지지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해당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천이 됐는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등과 무관하게 집권 여당의 후보자로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승리를 한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했을 가능성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여서 승리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됐음에도 미래통합당 후보자여서 패배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크다. [표 5-11]에 제시됐듯이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32.643배가 되는 것도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표 5-14]를 통해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후보자에 비해 8.767%p 더 득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에서 이 정도 차이는 당락을 결정짓고도 남을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경선 후보자가 비경선 후보자보다 본선 무대에서 더 큰 경쟁력을 보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경선 후보자끼리 또는 비경선 후보자끼리 경쟁하는 경우에는 경선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선 후보자와 비경선 후보자가 맞붙은 경우만 따로 떼어내 분석을 할 경우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표 5-17]부터 [표 5-22]까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와 미래통합당 비경선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비경선 후보자와 미래통합당 경선 후보자 간에 맞붙은 경우만 따로 추려내 [표 5-11]부터 [표 5-16]까지의 회귀분석을 다시 반복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부분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선-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담은 [표 5-22]에 따르면 공천 유형의 회귀계수는 5.081이다.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이라면 경선 후보자는 비경선 후보자에 비해 5.081%p 더 득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24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5-17] 경선-비경선 집단 간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표준오차	z	p-value
공천 유형	3.521*	1.466	3.02	0.003*
정당	41.900*	28.050	5.58	0.000*
현역	1.460	0.740	0.75	0.455
성별	0.973	0.715	-0.04	0.97
전직 단체장	0.685	0.448	-0.58	0.564
전직 의원	4.969	4.201	1.9	0.058
나이	0.973	0.032	-0.82	0.413
경쟁자 수	0.981	0.163	-0.11	0.911
텃밭	7.225*	2.228	6.41	0.000*
상수	0.018*	0.037	-1.98	0.048*

N=224, Pseudo $R^2=0.4479$ (*: $p < 0.05$)

[표 5-18] 더불어민주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표준오차	z	p-value
공천 유형	8.763*	6.296	3.02	0.003*
정당	1	-	-	-
현역	8.280*	7.426	2.36	0.018*
성별	0.478	0.515	-0.68	0.494
전직 단체장	6.245	7.827	1.46	0.144
전직 의원 ³⁷⁾	1	-	-	-
나이	1.003	0.050	0.07	0.94
경쟁자 수	0.969	0.253	-0.12	0.906
텃밭	5.514*	2.398	3.93	0.000*
상수	0.115	0.311	-0.8	0.423

N=108, Pseudo $R^2=0.4812$ (*: $p < 0.05$)

37) 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 4명 모두 당선돼 분석 대상에서 제외.

[표 5-19] 미래통합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당선 여부 회귀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표준오차	z	p-value
공천 유형	2.301	1.345	1.43	0.154
정당	1	-	-	-
현역	0.564	0.385	-0.84	0.402
성별	1.830	2.289	0.48	0.629
전직 단체장	0.318	0.253	-1.44	0.151
전직 의원	2.812	3.050	0.95	0.34
나이	0.953	0.044	-1.02	0.306
경쟁자 수	1.012	0.244	0.05	0.958
텃밭	9.019*	4.003	4.96	0.000*
상수	0.041	0.117	-1.13	0.258

N=112, Pseudo $R^2=0.4282$ (*: $p < 0.05$)

[표 5-20] 경선-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천 유형	5.767*	1.366	4.22	0.000*
정당	9.344*	1.373	6.8	0.000*
현역	4.482*	1.679	2.67	0.008*
성별	1.119	2.420	0.46	0.644
전직 단체장	1.238	2.207	0.56	0.575
전직 의원	5.571*	2.800	1.99	0.048*
나이	-0.045	0.094	-0.48	0.633
경쟁자 수	-1.760*	0.570	-3.09	0.002*
텃밭	6.524*	0.661	9.86	0.000*
상수	35.047*	5.881	5.96	0.000*

N=224, F=26.11, p=0.000, Adj R^2 =0.5034 (*: p < 0.05)

[표 5-21] 더불어민주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천 유형	6.374*	1.629	3.91	0.000*
정당	0	-	-	-
현역	7.371*	1.992	3.7	0.000*
성별	-0.707	2.806	-0.25	0.801
전직 단체장	3.296	3.078	1.07	0.287
전직 의원	8.479*	4.231	2	0.048*
나이	0.086	0.126	0.68	0.498
경쟁자 수	-2.085*	0.694	-3	0.003*
텃밭	5.430*	0.779	6.96	0.000*
상수	39.859*	7.096	5.62	0.000*

N=112, F=18.59, p=0.000, Adj R^2 =0.559 (*: p < 0.05)

[표 5-22] 미래통합당 경선-비경선 집단 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천 유형	5.081*	2.215	2.29	0.024*
정당	0	-	-	-
현역	0.929	2.768	0.34	0.738
성별	3.137	4.069	0.77	0.443
전직 단체장	0.074	3.216	0.02	0.982
전직 의원	4.718	3.917	1.2	0.231
나이	-0.127	0.139	-0.91	0.364
경쟁자 수	-1.408	0.914	-1.54	0.127
텃밭	7.780*	1.087	7.16	0.000*
상수	36.099*	9.001	4.01	0.000*

N=112, F=11.54, p=0.000, Adj R^2 =0.4317 (*: p < 0.05)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는 <가설 1-1>과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득표율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1-2>는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까닭에 정당별로 나타난 경선의 ‘보너스 효과’는 상이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효과가 존재한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선 후보자와 비경선 후보자가 맞붙은 경우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미래통합당에서도 경선 후보자가 비경선 후보자에 비해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뿐 아니라 정당별로 봤을 때도 <가설 1-2>는 지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2. 정당 외부의 요인

애초 본 논문에서는 후보자 수가 당선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을 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많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2-1>을 설정했다. 하지만 [표 5-11]에서 [표 5-13]까지 나타난 결과는 후보자 수와 당선 가능성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21대 총선이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20대 총선과 달리 거대 양당을 위협할 정당이 사실상 없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닌 지역구 당선자는 전체 253명 중 6명(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에 그쳤다. 그 중 무소속 당선자 4명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한 낙천자다. 정당과 무관한 순수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서울 종로구다. 전국에서 가

장 많은 11명³⁸⁾의 후보자가 나섰지만 후보자 숫자가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자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자는 합해서 98.35%를 득표했다. 나머지 9명의 후보자가 더 있었지만 모두 합해 겨우 1.59%를 얻는 데 그쳤다. 사실상 승패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당 외부의 요인과 관련된 두 번째 가설은 '여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는 <가설 2-2>다.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곳, 미래통합당이 84곳을 가져간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겉으로 보기에 도 여당 간판을 달고 선거에 나선 게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났다.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1]을 보면 정당에 대한 승산비는 32.643에 달했다.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32.643배라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00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가설 2-2>가 지지된다는 것이다.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 5-14]에서는 정당의 회귀계수가 8.767로 나왔다.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정당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득표율은 8.767 단위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후보자에 비해 8.767%p 더 득표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00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득표를 많이 할수록 당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가설 2-2>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 결과다.

그렇다면 승산비의 크기에 비해 회귀계수의 크기는 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물론 승산비와 회귀계수의 숫자 자체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다. 단순히 두 숫자를 비교해 어느 것이 크냐를 따지는 행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38) 당초 12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지만 한 명은 투표 전에 사퇴했다.

다만,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8.767%p 이내인 곳이 서울 49개 선거구 중 12곳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이런 숫자 크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크기의 득표율 차이만으로도 당락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그 자체로 당선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갔다는 의미다.

3. 후보자 개인의 요인

본 논문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면 당선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일수록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는 <가설 3>을 설정했다.

[표 5-23] 현역 집단과 비현역 집단의 선거 결과

단위: 명

구분	현역			비현역		
	후보자	당선	비율(%)	후보자	당선	비율(%)
더불어민주당	87	78	89.7	166	85	51.2
미래통합당	55	32	58.2	181	52	28.7
전체	142	110	77.5	347	137	39.5

[표 5-23]에 나와 있듯이 현역 의원 후보자와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당선율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현역 의원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표 5-3]과 [표 5-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선율과 득표율 모두 현역 후보자가 비현역 후보자에 비해 크게 높았고, t-검정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하지만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당선 여부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담은 [표 5-11]을 보면 현역 의원 여부에 대한 승산비가 1.694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에 비해 현역 의원인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1.694배다. 하지만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0.109여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정당별로는 어떨까. [표 5-12]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여부에 대한 승산비는 3.690이다.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1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반면 [표 5-13]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승산비가 0.797이다. 현역 의원보다 그렇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다만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0.622여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어떨까. [표 5-14]를 보면 현역 의원 여부의 회귀계수는 2.830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현역 의원 후보자가 비현역 의원 후보자에 비해 2.830%p 더 득표했다는 얘기다.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11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정당별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왔다. [표 5-15]에 나와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여부의 회귀계수는 4.417이다. 유의확률이 0.001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5-16]에 제시된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여부의 회귀계수는 1.364다. 다만, 유의확률이 0.462여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설 3>이 지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당선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면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21대 총선의 특색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인위적으로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역 의원 후보자가 미래통합당에 비해 32명이 더 많았고, 이

들 대부분이 수도권과 충청 등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 출마자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상당히 이뤄졌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현역 의원이 다수 출마했지만 낙선자가 속출했다. 두 정당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유리했던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 통제변수

본 논문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아니지만 중요한 통제변수로 다뤄진 게 텃밭 여부다. 본선 경쟁력에 미치는 경선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다른 선행연구에서 주로 봉착한 문제 중 하나는 지역주의 문제다. 단순히 경선 후보자와 비경선 후보자를 놓고 분석하면 경선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영남과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균열 효과를 거둬내면 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선행연구의 결론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경계만을 구분하면 완전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18~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세 번 다 승리했으면 3, 두 번 승리했으면 2, 한 번 승리했으면 1, 한 번도 이기지 못했으면 0으로 구분해 텃밭 여부를 통제했다. 서울만 해도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텃밭 여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예상은 적중했다.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1]에서 [표 5-13],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5-14]에서 [표 5-16]에 나타났듯이 텃밭 여부의 변수는 전체적으로든 정당별로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섯 차례의 회귀분석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00이었다.

[표 5-14]에 제시됐듯이 텃밭 여부의 회귀계수는 6.957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텃밭 여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득표율은 6.957%p 증가한다는 얘기다. 가령,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한 정당이 모두 석권했던

지역이라면 텃밭에 출마한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보다 6.957%p의 세 배, 그러니까 20.871%p를 기본적으로 더 갖고 선거를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압도적인 개인 경쟁력을 갖추거나 새로운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상대 후보자가 따라잡기 힘든 숫자다.

그밖에 성별,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여부, 전직 국회의원 여부, 나이 등은 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 결과의 요약

<가설 1-1>과 <가설 1-2>의 경우 양당의 후보자 집단 전체를 놓고 보면 가설이 명쾌하게 지지됐다. 하지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설이 지지됐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경선 후보자와 비경선 후보자가 맞붙은 선거구만 따로 추려내 분석했다. 그럴 경우 득표율을 회귀분석하면 미래통합당에서도 <가설 1-2>를 지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21대 총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가설 1-1>과 <가설 1-2>는 지지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제까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 가설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5-24]와 같다.

[표 5-24]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분	내 용	지지
가설 1-1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O
가설 1-2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득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O

가설 2-1	후보자가 많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다.	X
가설 2-2	여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O
가설 3	현역 의원일수록 당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X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시작됐다. 행정부의 전문화, 사법부의 정치화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이 시점에서 이들을 견제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선출되는지를 연구하는 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구성 단계에서부터 민주적이어야 본래의 임무인 민주적 통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 내 소수의 실력자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보다는 경선을 통한 방식이 과정의 민주성뿐 아니라 결과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 21대 총선 253개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선을 통한 후보자 공천은 전략(우선)공천, 단수공천 등 비경선 방식보다 당선 가능성이나 득표율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19대 총선을 분석한 박명호·차홍석(2014)의 연구나 20대 총선을 분석한 김한나·박원호(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론이다. 이들 선행연구는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경선을 통해 본선에 나선 후보자가 비경선 방식으로 뽑힌 후보자보다 나은 결과를 얻은 게 지역주의 균열 덕이라고 해석했다. 거대 양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을 분점하고 있고, 그곳에서 주로 경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선의 보너스 효과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통해 얻은 보너스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주의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통제했다. 단순히 영남과 호남 지역을 구분한 게 아니라 18대부터 20대 총선까

지 지난 세 차례의 총선 결과를 토대로 텃밭 여부를 가려 통제를 했다.³⁹⁾ 21대 총선에서도 텃밭의 중요성은 매우 컸으나 그러한 텃밭 효과를 거뒀던 뒤에도 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경선 후보자 집단과 비경선 후보자 집단이 맞붙었을 때는 경선 후보자 집단이 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텃밭 효과 그 자체가 매우 크다는 걸 확인한 것도 적잖은 의미로 보인다. 1990년 1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 야당이던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은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집권당을 만들어냈다. 이후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분열은 한국 정치의 큰 병폐가 됐고, 그런 분열은 선거 결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확인한 강력한 텃밭 효과는 앞으로 지역주의 문제를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숙제를 던졌다. 같은 시·도, 심지어 같은 시·군·구의 지역구인데도 서로 다른 정당의 텃밭으로 분화했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대로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 후보자인지 아닌지가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통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 속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정권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을 압도한 양상이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선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승부한 후보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채 결투를 벌인 모양새였다. ‘여당 프리미엄’이 컸던 셈이다.

반면 현직 국회의원이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때 얻는 이점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른바 ‘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의 집권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에 대

39) 같은 서울이어도 강남구같은 미래통합당 계열이, 강북구같은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8~21대 총선에서 각각 연속으로 당선됐다. 단순히 시·도를 경계로 텃밭 여부를 가려서는 안 되고 각각의 지역구 특성을 살펴 누구의 텃밭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 인위적인 공천 배제를 최소화했고, 그렇게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게 현직 효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상당수가 낙선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자 수가 많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란 예측도 빗나갔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이들 정당 외의 후보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가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21대 총선은 여러 면에서 최근의 총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양대 정당을 위협하던 제3의 정당이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선거 시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겹치면서 비대면(非對面)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신인 정치인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의 성향이 강화된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론이 21대 총선을 넘어 전체 총선을 관통할 수 있는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변수만으로 집권 여당의 승리 요인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국난(國難)으로 여겨졌다. 그런 만큼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고, 그런 표심(票心)이 승부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관측하고, 적절하게 통계적 처리를 하는 문제는 본 논문에서 다룰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이 결정되고, 또한 지금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끼친 영향도 다뤄내지 못했다. 더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는 부촌(富村)일수록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가 정당 지지의 양극화도 불러온 셈이다. 넓게 봐서는 경제적 요인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전투표의 영향도 짚어내지 못했다. 이번 총선은 4월 15일 선거일 당일에 진행된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박빙 승부였다. 하지만 4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표가 쏠리면서 결과적으로 승부의 추도 기울었다. 불과 닷새 간격으로 치러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표심이 서로 달랐던 이유와 그로 인한 투표 행태의 변화 등은 앞으로 분석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이 본선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공천의 민주화가 정당의 생존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한 셈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락과 득표율을 좌우하는 요인을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관점으로 현실의 선거를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21대 총선의 텃밭 효과만 하더라도 주민 구성과 경제력, 각 정당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 논문의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총선의 승부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아내는 건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참 고 문 헌

- 강병서·김계수·오윤조, 1997, 인과관계 분석에서 경로도를 이용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 「사회과학연구」 제23집, 145-173.
- 강승식, 2012,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1-29.
- 강원택, 2008,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109-128.
- 강원택, 2009,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연구」 제14권, 35-63.
- 길정아, 2011,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과정의 동학: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1호, 292-315.
- 김석우, 2004, 기초단체장 총원 과정에 관한 연구: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215-231.
- 김석우, 2006, 17대 총선과 정치적 총원: 당선자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제2호 287-316.
- 김영태, 2004,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제도와 공천 과정: 지역구 후보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제2호, 107-124.
- 김용호, 2003,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 지속과 변화, 「의정연구」 제9권, 6-28.
- 김은희, 2012,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혁 공천 방안에 관한 연구: 상향식 공천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민주정책연구원.
- 김재훈, 2016, 공천 제도에 대한 고찰: 공천 방식에 따른 입법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3호, 25-40.
- 김한나·박원호, 2016, 제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 결정요인: 정당의 공천 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 제2호, 51-76.
-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 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41-63.
- 박명호, 2007, 2006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분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0권, 79-95.
- 박명호·차홍석, 2014, 2012년 총선의 공천 유형과 정치적 결과, 「아태연구」 제21권 제4호, 141-159.
- 서대원, 2018, 「한국 국회의원의 공천 유형과 정당 충성도: 제19대 국회에 관한 경험적 분석」, 경북대학교.
- 선종근·하미승·전영상, 2013, 한국 정부의 행정이념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 규범과 현실 사이,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1호, 67-102.
- 성치훈·진영재, 2016, 한국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적실성과 보완점: 제도와 유권자 문화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22권 제3호, 83-115.
- 심지연·김민전, 2006, 「한국 정치 제도의 진화 경로: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 백산서당.
- 윤종빈, 2012,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5-37.
- 이정진, 2019, 정당 공천의 민주화: 당원 인식조사를 통해 분석한 바람직한 공천 방향, 「미래정치연구」 제9권 제1호, 31-60.
- 이종곤, 2015, 오픈 프라이머리와 정당정치: 죄수의 딜레마와 계과갈등,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519-539.
- 이준한, 2014, 한국의 민주적 정당공천제: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제, 「선거연구」 제5호, 5-26.
- 임종훈, 2017, 제20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 방안, 「입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141-166.
- 전용주, 2010, 한국 정당 후보 공천 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1호, 37-69.

- 전용주·임성학·김석우, 2010, 정당 공천 유형과 후보의 본선 경쟁력: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OUGHTOPIA」 제25권 제1호, 127-156.
- 전용주·공영철, 2012, 정당 공천 유형과 경쟁도 그리고 선거 경쟁력: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133-151.
- 정진민, 2004,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상향식 공천 제도와 예비후보 등록제,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제2호, 5-18.
- 조진만, 2012, 여론조사 공천의 이론적 쟁점과 기술적 과제 그리고 정당의 선택, 「의정연구」 제18권 제2호, 131-155.
- 진영재, 2012, 한국 정당 발전 모델에 대한 일고찰: 2012 대선 정국과 정당 구조 개혁, 「선거연구」 제3권, 27-64.
- 최준영, 2012, 한국 공천 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59-85.
- Hazan, Reuven and Rahat, Gidon, 2010, Democracy within Partie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tz, Richard, 2001, The Problem of Candidate Selection and Models of Party Democracy, Party Politics, 7(3), 277-296.
- Mayhew, Davi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Yale University Press.
- Michels, Robert, 1915, Political Parties, London: Jarrold and Sons.
- Pane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hat, Gideon and Hazan, Reuven, 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ty Politics, 7(3), 297-322.
- Schattschneider, Elmer Eric, 1942, Party Government: American Government in A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Ware, Alan, 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Winning Factors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21st General Election-

Heo, Ji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outcome of party nominations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specially this study reviews how the two main parties -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the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 nominated their candidates running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identifies the factors to the electoral victories of individual candidate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rimary effect and ruling party premium and incumbency advantage are factors affecting election. Most of all, focus on the primary effect. In other words, this study analyzes intensively on bottom-up style candidate selection. And estim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candidate selections and

their political outcom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a few consequences. First, the bonus effect of the primary exist. That is to say, bottom-up styl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helps candidates earn more votes and their winning chances. Second, ruling party premium is strong. Many DP candidates won election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member of the ruling party. Third, incumbency advantage was not existing.

There are limits to this study. There was no third party threatening the two main parties. And the election was held in the mids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or that reason, there were other factors as well, but they were not analyzed.

keywords :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21st General Election, 2020 South Korean Legislative Election, Candidate Selection, Nomination Process, Primary

Student Number : 2007-22226